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정섭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도채 부연구위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김용욱 부연구위원
민경찬 연구위원
유은영 연구위원
이정해 연구위원
박지숙 연구위원
정유리 연구위원
홍승택 연구위원
정희라 연구조원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17년 주요 업무 내용 / 13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7
- 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26

2. 조사·연구 업무

-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37
-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46
 - 2.2.1.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47
 - 2.2.2. 농어촌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48
-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50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3.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57
3.2. 농어촌 서비스 기준 협의회 개최	61
3.3. 삶의 질 정책 이슈리포트 발간	63
3.4.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70
3.5. 삶의 질 향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73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고 줄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이다.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법’이라고 줄임.)」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과 활동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5조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줄임.)’의 수립·변경 심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을 담당한다.

-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6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발표

- 2016.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 개최
- 2016.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개최
- 2016.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개최
- 2016.11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1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 개최
- 201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개최
- 2017.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개최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보조한 연구기관 등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의 환경 및 주민의 정책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
 - 정책 추진 상황의 현장 중심 모니터링과 성과 체계를 마련한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심층 평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DB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그 외에도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 2010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용 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 2011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 과제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2011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문지원기관 관련 업무 수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20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 201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2013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2014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4년 11월 21일)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2015년 ~ 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15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15, 2016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2016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및 주민 만족도 조사
- 2016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17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2017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7개 부문) 실시
- 2017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2017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및 주민 만족도 조사
- 2017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7년 12월 13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제5장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근거를 두고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조직으로 2015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을 ‘삶의질정책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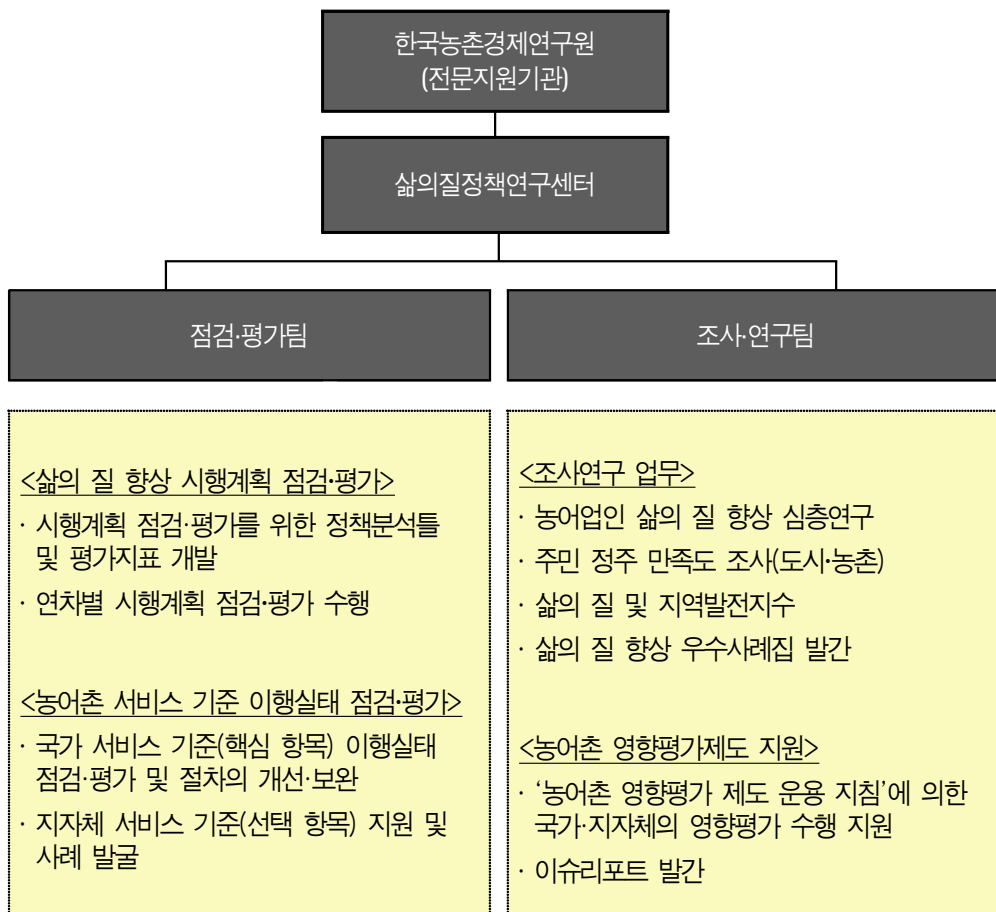
□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로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 등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에 대해 부문별 세부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이와 연계된 지역 정책을 발굴하고, 지자체별 선택 항목의 제도화를 점검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인지적 관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 운영]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심층연구 수행, 정책 과제 발굴 등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

경험과 성과를 확산시킨다.

- [기타 지원 업무]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등 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는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2015~2019)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농어촌 맞춤형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주체계별 기능을 강화한다.
 -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삶의 질 정책 기초 변화>

구 분	과 거	미 래
이 념	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위한 도·농간 격차 완화	농촌다움·농어촌 가치 중시, 주민체감 증진
정책 대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지역 공동체,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정책 범위	복지, 교육, 의료 등 필수사회서비스 확충	안전, 환경 등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 략	농어촌 지원 확대 부문별 정책 강화	농어촌 맞춤형·특화 정책, 분야 간 연계·통합 지원
사회 서비스	HW 정비, 인프라 구축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공간정비	권역·마을기반 조성, 유형별 차등 보조	중심지 기능 및 마을과의 연계 강화, 先역량 강화와 역량 단계별 지원
산업·일자리	도시 자본 및 투자 유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순환, 1·2·3차 산업 연계
정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협력, 관(官)주도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민간역할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평가 및 환류	하향식 ▶ 상향식	쌍방향 네트워크

□ 비전 및 추진 기반

- (비전)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한다.**
- (추진 기반) 중앙정부는 부처 간 연계성을 높이고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며, 현장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높인다.

□ 부문별 목표

- 기본 비전의 설정에 맞춰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 2차 계획의 지역 역량 부문은 제3차 계획의 추진 체계에 포함되었으며, 안전 부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 보건·복지

-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3. 정주생활기반

-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일자리

-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 농어촌다움이 유자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 자연재해 및 범좌안전사고에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조성



CHAPTER

II



2017년 주요 업무 내용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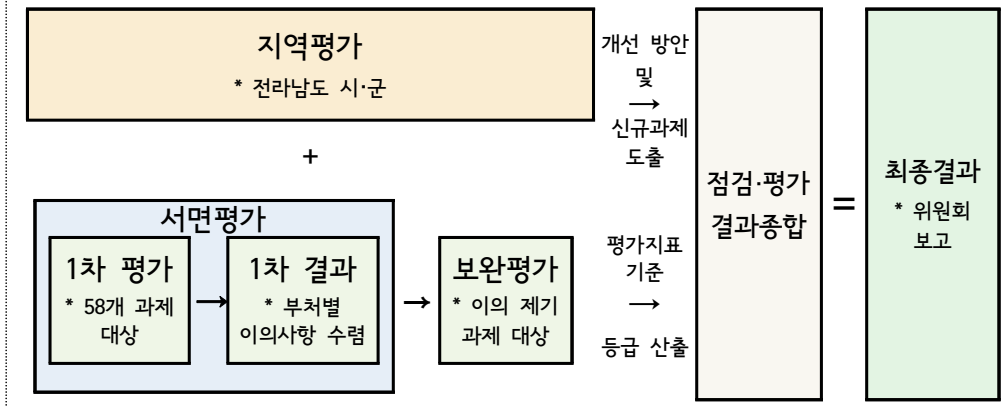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개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17개 부처·청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및 주민 체감과 만족도를 점검·평가하고, 개선 대책과 신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7년은 '16년 시행계획 185개 과제 중 58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단위의 서면 평가와 정책군·지역군 단위의 지역평가를 병행하여 과제 단위의 개선안 뿐만 아니라 정책군 단위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서면평가는 과제당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지표에 따라 과제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우수·부진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지역평가는 개별 사업 평가 중심의 서면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정책군·지역군 단위로 종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 평가 체계 >

서면평가와 지역평가를 병행하되, 이의제기·보완을 통해 투명성, 객관성 보강





❖ 부문별 평가 주요 결과

□ 보건·복지 부문

- 서면평가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관련 10개 세부 과제의 평균 점수는 81.3점으로 전체 평균 85.7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과제는 우수,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및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과제는 농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 운영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16년 농어촌 지역의 추가적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확충되지 않았다.
 - *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산’ 과제는 투입 예산에 비해 목표치가 낮게 나타나 적정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및 성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지역평가는 강원도 홍천군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관련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자체 삶의 질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서비스 전달 및 주민 체감도 중심으로 조사·평가하였다.
 - 공공보건 시설·장비 현대화, 분만취약지 지원,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등 주요 사업은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하게 집행되었다.
 -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등과 관련된 지자체 사업은 평가 시점에서 추진 현황과 성과의 측정이 어려웠다.

〈분만취약지 지원(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기본사업) 운영사례〉
 지자체와 분만 산부인과가 협력하여 생활권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등록을 실시하고 고위험 임산부를 발굴하여 검진과 응급이송 서비스를 제공

-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는 ‘구급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예산 편성’과 ‘지역 센터 역할 확대 유도’이다.
 - 구급 인력 고용, 전문 구급 장비 구입, 구급용 헬기·선박·차량 증설 등 구급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농어촌 소방서가 확보한 기존 자원으로 운영 중이다.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성과 지표를 지역의 자체 사업 발굴, 자살예방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역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성과 지표는 센터 개소 수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 교육 부문

- 서면평가 결과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에 관련된 4개 세부과제 평가 점수 평균은 93.9점으로 전체 평균(85.7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과제의 평가 점수는 우수했으나, ‘농어촌 교육지원 체계화’ 과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 * ‘농어촌 교육지원 체계화’ 사업과 관련한 사업 중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평가는 충남 논산시를 대상으로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에 속한 4개 과제를 평가하였다.
 - 논산시는 ‘왕석초등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여 문화예술 중심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장이 주도하여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운영비를 확보하였다(농어촌 희망재단 지원 농촌 작은 문화 교실 운영비, 논산시 대응투자 보조금, 유소년 승마단 운영보조금 등).



<왕석 초등학교의 문화예술 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

문화예술체육 체험 확대 비전 수립 후 선생님들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 운동을 함께 추진하여 풋살 경기장, 골프연습장, 승마장 조성 후 전교생 36명과 학부모 11명이 참여하여 교육 공동체를 조직하고 골프, 댄스, 공예, 록밴드 교실, 소품 만들기, 악기연주 등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 부문 평가를 종합해보면, 성과 우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은 사업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를 육성하고자 교장 공모 학교 지정 시 농어촌 소재 학교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 서면평가 결과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과 관련된 8개 세부과제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체 평균(85.7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농어촌 마을 유형별 역량단계별 개발’ 과제는 우수했으나, ‘어촌공동체 경영활성화’, ‘산촌주민 역량 강화사업’ 과제는 보완이 필요했다.
 - *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사업은 역량 강화 교육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므로 교육 추진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평가는 경북 상주시를 대상으로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관련 4개 세부과제를 평가하였다.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 현장 포럼을 시행하는 조직으로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 및 학습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반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부족해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간 60개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현장 포럼을 실시함에도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하였고, 마을 맞춤 학습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다 교육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상주에서는 귀농자를 중심으로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자생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귀농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 구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농산어촌 지역개발의 사후 연속성과 지역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귀산촌 활성화 지원, 어촌공동체 경영활성화 등은 점차 주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관련 14개 세부과제의 평균 점수는 82.0점으로 전체 평균인 85.7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과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어촌 관광품질 제고’,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과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 *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과제는 성과 지표가 사업이 완료된 후 1차 산출 지표에 국한되어 사업 결과를 측정하는 데 미흡하였다.
- 제주도의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에 속한 세부 과제 추진 실태를 대상으로 지역평가를 실시하였다.
 - 제주도는 12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의 어촌체험마을, 치유의 숲 등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 농어촌 관광을 추진하는 마을 대부분은 중앙정부, 기초 지자체의 정책 사업들이 기반이 되어왔으며,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마을간 농어촌관광 콘텐츠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홉굿 마을 사례〉

아홉굿 마을은 보리빵, 보리수제비, 보리빵 샌드위치, 보리버거, 보리피자 만들기와 토마토, 파프리카, 감귤 수확, 연못낚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천소성가마 재현, 장기자랑, 서쪽하늘밴드공연, 온난화대응농업, 지역 특산물 전시 판매, 자전거 마을투어 등을 진행함.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으뜸촌으로 선정함.

- 주요 개선 과제로는 농어촌 관광 관련 일부 사업에 실제 관광 서비스의 품질 개선 등 항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농촌관광 품질 제고 사업은 성과 지표가 서비스 교육실시, 등급평가 등의 산출 지표로 한정되어 있으나 부수 지표로 활용 중인 방문 마을 만족도 항목을 성과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사업체 수 항목이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항목 등을 성과 지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문화·여가 부문

-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관련 3개 세부과제 평균 점수는 83.4점,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관련 2개 세부과제 평균 점수는 82.9점으로 전체 평균 85.7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 ‘문화관광 축제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과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과제는 보완이 필요했다.
 - *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은 실제 전통문화자원 복원 보다는 실제 지역의 문화 축제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농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나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정책적 효과가 큰 사업에 해당, 시설 조성 이후의 주민 참여도, 만족도 등의 성과 지표 추가가 필요하다.
- 지역평가는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관련 세부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넘어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직접

참여 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지원과 농어촌 마을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 기준 설정은 개선해야한다.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사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콘텐츠 발굴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였으며, 축제의 이익이 농촌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함.

-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지원 대상 선정 및 성과 지표 개정이다.
 -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사업은 지원 대상에 사업의 목표와 관련 없는 지역 축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은 관광객의 만족도만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 환경·경관 부문

-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련된 7개 세부과제 서면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89.4점으로 전체 평균 85.7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은 우수 과제로 평가되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보완이 필요한 과제였다.
 -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지역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의 긍정적 효과의 확대가 필요하며, 하천·하구 오염에 영향을 주는 일정 구역까지 포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지역평가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7개 세부과제별로 적합한 사례지를 찾아 추진 현황 및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 금산군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설치에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금산군의 재정 부담 없이 위생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어떻게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상주시는 관내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농촌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며, 영농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154개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였다.
 - 폐비닐과 농약 빈 병 외에도 농촌에서 다량 배출되거나 배출 후 환경오염이 큰 품목인 과수 착색용 폐반사 필름(소각 불가, 겨울철 전주 정전 사고 위험) 등에 대해서도 수거 및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환경·경관 부문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관리 체계 확립과 수거 보상금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확대하려면 예산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
 - 사업의 효과가 주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갯벌 복원은 어촌경제 활성화, 어가 소득 기회 창출 등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문화 복지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주민 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안전 부문

-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관련 10개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88.5점으로 전체 평균 85.7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어업재해보험’과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및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과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및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은 가입실적이 미미하므로,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홍보 노력 및 성과 지표 개편이 필요하다.
- 지역평가는 전남 해남군을 대상으로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관련 세부과제 5개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 2016년 3분기 해남군 11,893농가에서 농업인 안전 공제 상품을 가입하여 계획 대비 91.48% 집행률을 보였다. 지자체의 가입 독려로 가입률을 높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다.

- 어선 보험과 어업재해보험은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납부 금액이 커 가입률이 낮다.
- 안전 부문 평가에서 가입률을 향상하고자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부문별 평가 대상 및 서면평가 결과 >

부문	평가 지역	과제	세부 평가 과제	서면 점수
보건 복지	홍천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외 9개	81.3
교육 여건	논산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외 3개	93.9
정주 기반	상주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외 7개	93.2
경제 활동 일자리	제주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외 13개	82.0
문화 여가	전북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외 2개	83.4
		전통·향토 문화의 전승·활용	‘전통문화자원 복원확산’ 외 1개	82.9
환경 경관	금산 상주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참여형 마을 도량 살리기’ 외 6개	89.4
안전	해남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외 9개	88.5



1.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개요

- 정부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충족하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법’이라고 줄임.)을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항목과 세부 내용, 항목별 서비스 기준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공표하였다.
 - 정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5년부터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한하여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선택 항목’은 9개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에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 지자체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를 원활하게 점검·평가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 시도 연구원 간 MOU를 체결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중이다.

❖ 주요 추진 내용

▣ 2017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서비스이다. 따라서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한다.
 - 핵심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로 현재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중기 목표치를 현 시점에서 달성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 중기 목표치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년~2019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2014년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향후 5년 동안의 기준치(baseline)로 삼았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7개 분야 17개 항목(22개 세부기준)에 대해 통계청 승인 공표 통계, 각 부처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29개)를 활용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 해당 자료는 자료 수집 기간 당시('17. 9월~12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되,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 통계를 사용하였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복지	1) 진료 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스데이터	공식통계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실	행정조사
	2) 응급 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공식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공식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공식통계	
		ii)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2. 교육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지자체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행정조사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 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 실적	협조자료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 활동·일 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조사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통계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행정조사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수 / 총 건수) × 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 2017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 보건·복지 부문은 진료서비스 항목의 달성도 감소가 두드러졌다.
 - 일부 군 지역의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면서 진료서비스 항목의 달성도가 감소하였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농어촌 시·군이 늘어났다.
 -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항목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던 작년과 달리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하였다.
- 교육 부문은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감소하였다.
 - 전국 농어촌 읍·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둘 다 유지하고 있는 읍·면 비율은 70.2%로 전년 대비 1.6%p 감소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약 59%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현재 18.9%로 집계되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기준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상수도, 난방, 광대역통합망 항목 모두에서 기준 달성률이 전년에 이어 소폭 향상되었다.
 - 대중교통 항목은 5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를 사용하여 전년 대비 달성률 변화를 직접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0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소폭 감소하였다.
-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 부문은 기준 달성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문화·여가 부문은 소폭 감소하였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하수도 항목(환경·경관 부문)은 매년 꾸준히 기준 달성률이 향상되었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문화·여가 부문)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 안전 부문은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하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방법설비 항목은 기준 달성률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반면 소방 출동 항목은 소폭 감소하여 현상 유지에 그쳤다.
 - 경찰 순찰 항목은 작년에 이어 경찰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총 17개 항목 중 향상된 항목 수는 8개, 유지 1개, 하락 6개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은 2개로 나타났다.

<2017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6	2017	16-17 증감
1. 보건·복지	1)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73.9	71.7	↘
	2)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98.6	98.6	-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70.1	71.1	↗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69.2	69.6	↗
2. 교육 여건	5) 초·중 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71.8	70.2	↘
	6) 평생 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19.7	18.9	↘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	-	X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69.3	71.3	↗
	9) 난방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57.0	60.0	↗
	10) 대중 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90.4	88.6	↘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92.8	96.4	↗
4. 경제 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67.4	75.4	↗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92.0	91.3	↘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6	2017	16-17 증감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81.0	82.0	↗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43.2	49.3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25.2	24.6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 기준 항목별로 2019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의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 진료서비스, 초·중학교, 평생교육, 문화·여가의 4개 기준 항목에서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부문과 일부 항목(응급서비스, 광대역통합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지역이 많지 않다.
- 이행실태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항목(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일지라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 전년 대비 군 지역의 이행실태가 다소 개선되었다.

- 군 지역은 진료서비스와 초·중학교의 2개 항목에서 중기 목표 달성 지역이 감소한 반면 도농복합시는 평생교육, 창업 및 취업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3개 항목에서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농복합시에 비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군 지역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군 지역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핵심 항목 중기목표치 달성 시군 현황>

부문	핵심 항목	군(82개)		도농복합시(56개)		전체 농어촌 시·군(138개)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47	44	55	55	102	99
	2) 응급서비스	42	49	55	55	97	104
	3) 노인	9	14	2	5	11	19
	4) 영유아	26	32	31	31	57	63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12	11	9	9	21	20
	6) 평생교육	7	8	14	12	21	20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	-	-	-	-	-
	8) 상수도	16	16	16	23	32	39
	9) 난방	9	9	22	24	31	33
	10) 대중교통	0	0	1	1	1	1
	11) 광대역통합망	59	70	41	48	100	118
4. 경제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43	56	50	48	93	104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73	73	54	53	127	126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6	7	30	31	36	38
7. 안전	15) 방범설비	21	31	8	13	29	44
	16) 경찰 순찰	-	-	-	-	-	-
	17) 소방 출동	0	0	0	0	0	0

- 주 1) 음영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2) 응급서비스의 경우 소방서가 입지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2016년 114개, 2017년 117개 시·군 대상).
 3) 난방 항목은 읍 지역이 없는 3개 시·군(웅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4) 주택, 경찰순찰 항목은 데이터 부재로 점검 불가능함.

□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대부분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부산시 기장군은 노인과 초·중학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대구시 달성군은 방범설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울산시 울진군은 방범 설비와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반면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은 전체 15개 항목 중 11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경기도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13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이행실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중기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다수 존재했다.
- 강원도는 총 9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다.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상수도, 난방 등 총 9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체 시·도 평균보다 저조하며, 특히 정주생활기반 부문(난방, 상수도)과 안전 부문(소방출동)의 이행실태가 크게 저조했다.
 - 반면 노인, 영유아, 교육 부문에서 타 시군 보다 높은 이행실태를 보인다.
- 충청북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2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충청북도는 영유아, 초·중학교, 상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인다. 특히 상수도와 초·중학교 항목은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나타냈다.
- 충청남도는 총 7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노인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며, 평생교육, 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도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 전라북도는 총 7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였다.
 - 영유아, 평생교육, 문화 프로그램 항목에서 9개 도 중에 가장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반면 상수도, 방법설비, 통학수단 제공 학교 비율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는 총 11개 기준 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다.
 - 진료서비스, 하수도 항목이 9개 도 중에 가장 낮으며, 보건·복지와 안전 부분의 모든 항목에서 이행실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 경상북도는 방법설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다.
 - 경상북도는 9개 도 중에서 이행실태가 가장 저조하며, 특히 경제활동일자리, 평생교육, 소방출동 등에서 매우 낮은 이행실태를 보였다.
- 경상남도는 총 8개 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경상남도는 교육 부분의 이행실태가 저조하며 특히 방법설비, 영유아, 초·중학교 항목의 이행실태가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타 도에 비해 하수도 항목과 소방출동 항목의 이행실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 제주도는 정주생활기반과 안전 부문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특히 난방, 대중교통, 광대역통합망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2. 조사·연구 입무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2.2.1.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2.2.2. 농어촌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개요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했다.
 - 장기적인 목적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2017년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주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다. 둘째,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다. 시계열 분석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전 지역의 동을 도시로, 전 지역의 읍면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표본을 추출했다.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했다. 조사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은 도시 주민 1,039명, 농어촌 주민 1,991명으로 총 3,030명이다.
 - 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화 인터뷰 조사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와 온라인 조사(Online-survey)를 병행했다. 2017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1달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조사 항목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7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농촌·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행복감 ○ 주관적 웰빙 측정 5문항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별로 3~6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려고 전년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5개 문항을 추가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성과를 농어촌 주민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확인하려고 전년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5개의 문항을 추가했다. 제3차 삶의 질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 사업과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을 비교했다. 농어촌 주민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설문 문항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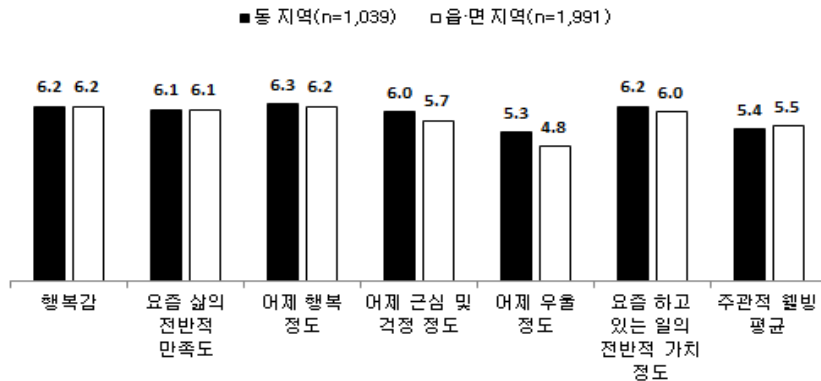
<2017년 조사 추가 문항>

	질문내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신규 문항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신규 문항	보건·복지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정주생활기반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문화·여가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 ‘나는 지금 행복하다’의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평균 점수 모두 6.2점이었다.
 - 전년도 결과에 비해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행복감 평균 점수가 0.2점 가량 하락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평균 점수는 현재 조사 형태를 갖춘 2015년 조사부터 계속 하락했다.
- 2017년 조사에서 시범 실시한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어제 행복 정도’, ‘일의 가치’와 같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근심과 걱정, 우울감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선 도시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 5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했다¹⁾. 도시 주민의 평균값은 5.4점, 농어촌 주민의 평균값은 5.5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점수가 더 높았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의 설문 문항으로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도시 주민보다 농어촌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 즉, 거주 지역의 정주 환경과 생활에 대해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3번과 4번 문항의 답변을 역코딩하여 ‘주관적 웰빙’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했다.

-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와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의 문항에 대해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도시 주민의 평균 점수가 농어촌 주민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평균 점수/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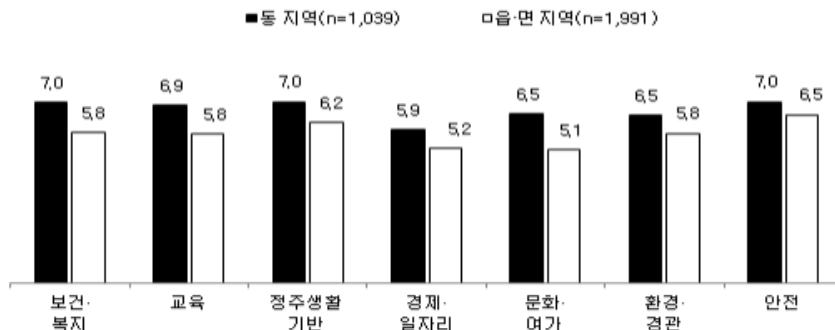
구분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사군 발전 전망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도시 지역(동 지역)	6.7	6.3	6.8	6.7	6.9	6.8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6.5	6.2	6.0	6.2	6.4	6.5
전체	6.6	6.2	6.4	6.4	6.7	6.6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모든 부문에서 도시 주민의 만족도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문화·여가 부문이 도시 및 농어촌 주민 만족도 차이의 폭이 가장 컸고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이었고, 정주생활기반이 그 뒤를 이었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문화여가’이다. ‘경제활동일자리’도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단위: 점)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건복지	5.7	5.6	6.2	6.4	6.4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	5.8	5.9	5.8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2	5.7	5.5	5.6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7	6.0	6.0	5.7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9	5.9	6.0	5.7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	-	5.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7년 신규문항)		
교육	4.9	5.3	5.7	5.6	5.7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	5.5	5.3	5.6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7	5.5	5.4	5.2	5.8	5.4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	-	6.1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2017년 신규문항)		
		-	-	-	6.0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2017년 신규문항)		
정주생활기반	5.3	5.8	6.5	6.4	6.4	주거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5.0	5.8	6.1	6.3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4.8	6.1	6.0	6.2	6.2	생활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6	5.7	5.8	5.8	5.8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	-	6.7	6.9	6.9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	5.6	5.6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2017년 신규문항)	
경제활성·일자리	4.3	4.2	4.6	4.8	5.1	5.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6	4.9	4.8	5.0	5.3	5.3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3	4.8	4.8	4.8	5.2	5.2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3.2	3.6	4.8	4.8	5.2	5.2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8	4.6	4.6	4.5	5.0	5.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	-	-	5.3	5.3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2017년 신규문항)
환경정화	5.8	5.7	6.3	6.2	6.1	6.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	5.0	5.8	5.1	5.3	5.3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상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8	6.4	6.2	6.2	5.9	5.9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안전	6.5	6.7	6.6	6.7	6.6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4		6.3	6.4	6.3
	6.3	6.8	6.6	7.0	6.7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6.4	6.6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5.9	6.1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체	5.1	5.6	5.6	5.8	(전체평균)	

주1: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 2016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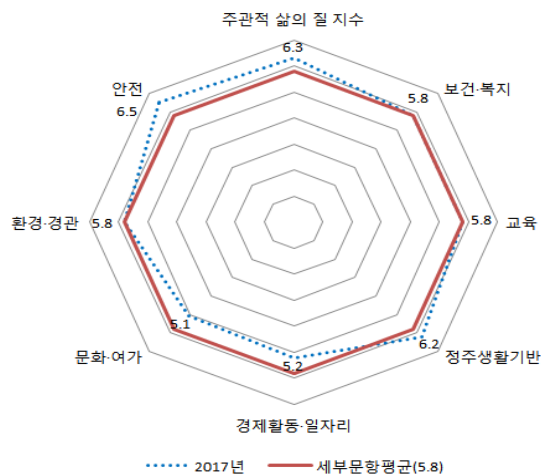
주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주3: * 농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구한 2017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6.3점이다. 전년도에 비해 0.7점 상승하여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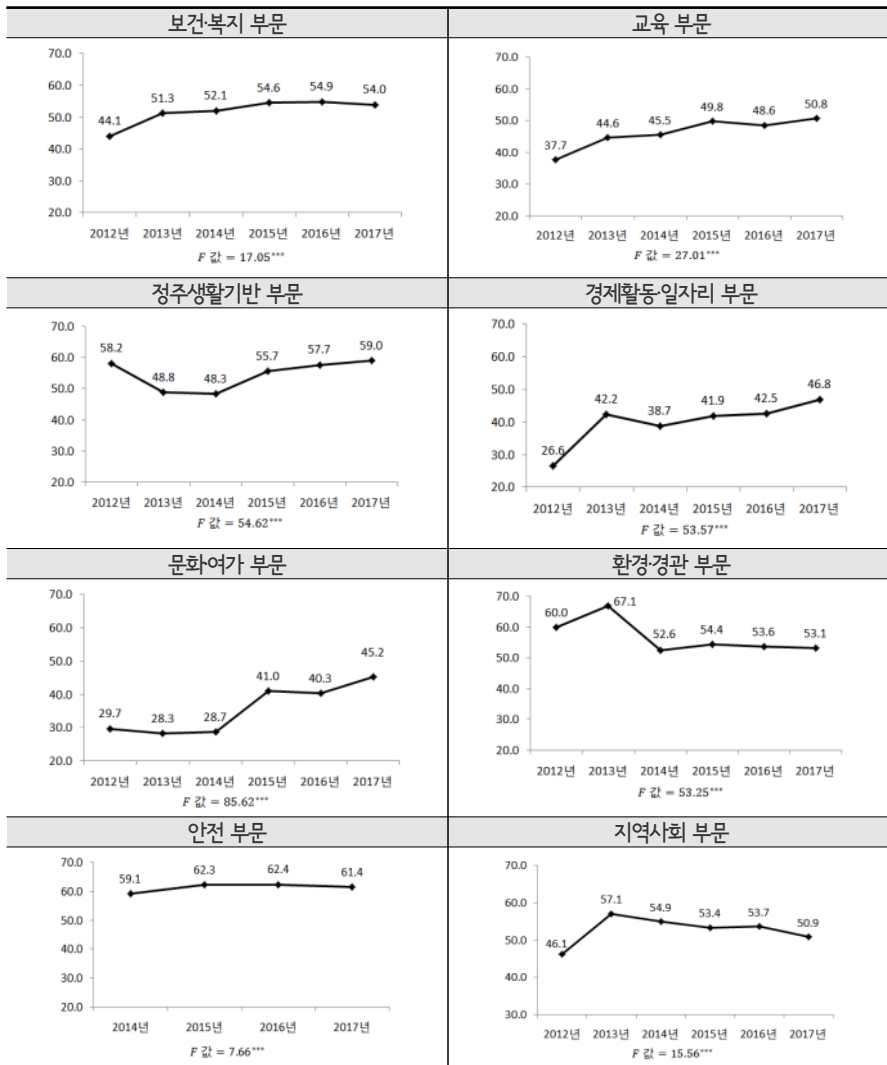


▣ 부문별 정주 여건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

○ 그동안의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환경·경관, 지역사회 외의 6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추세다.

- 큰 폭으로 만족도가 상승한 정책 부문은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정주생활기반이다. 환경·경관,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는 하락했고, 특히 지역사회 부문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 시계열 분석 결과>





□ 소결 및 시사점

- 그동안 농어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활용해 온 문항인 ‘지금의 행복감’을 ‘주관적 웰빙’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조사 결과에서도 ‘지금의 행복감’ 문항은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웰빙의 5개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5개 측정 문항의 응답을 평균하여 산출한 주관적 웰빙 지수는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해당 부문의 정책 투입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 그러나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점수는 다른 부문보다 낮다. 문화여가 부문과 관련해서 중심지에 집중된 여가 서비스를 배후지까지 전달할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관련해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조사에서 농어촌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 불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련 정책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도 분석되었다. 그런데 세부 항목 중 ‘취약계층 복지 지원’의 만족도는 2015년 이후 하락했고, 2017년도에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었다. 면 지역 주민이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양질의 학교 교육’에 대한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2016년부터 40점대(100점 만점)로 하락했다.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도 읍·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약 10점이었고, 면 지역의 만족도 점수는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7대 정책 부문 중 유일하게 환경·경관 부문의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 원인을 파악하려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 동안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0.1%였다. 농어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반면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7대 정책 부문에 대한 만족도 중 유일하게 이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경관은 주민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다.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 개요

- 삶의 질 향상 정책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연구는 '15년 구축한 삶의 질 정책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한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연구원이 전문성을 지닌 분야별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해왔다.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정한 국가기준인 7대 부분, 즉 ① 보건·복지, ② 교육여건,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생활안전)에 포함되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주제별로 농어촌의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 및 현장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정책 추진 실태의 분석 대상은 삶의 질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세부사업을 참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17년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17~'19) 중간 시점으로 전문지원기관의 위원회 지원 기능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심층연구는 국책연구원과 협력한 분야별 연구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업무 체계 개선과 주요 이슈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심층연구로 추진하였다.

<심층연구 내역(2017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제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농어촌 서비스 기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평가 결과 환류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 지침 개발

2.2.1.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 (배경)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여 의료·문화·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어촌의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행정리 비율은 6.4%에 이르며 10회 미만 운행하는 행정리는 54.0%이다.
 - 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소형 버스·택시를 활용한 ‘농촌형 교통 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범위가 17개 시·군 410개 행정리에 그쳐 사업의 혜택을 본 농어촌 주민은 많지 않았다.
- (주요 내용) 일반적 농촌 마을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 통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 참여·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강화와 유형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33개 행정리에 3,487명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을 대상으로 주민 통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우 한 달 평균 읍 소재지 9.3회, 면 소재지 6.9회를 방문하였다.
 - 주 방문 목적은 장보기·쇼핑과 병원 방문이었다. 자가용 이용 비율이 57.2%였으나 60대부터 버스 이용 비율이 급격히 오르며 70대는 자가용 보다 버스 이용 비율이 높았다.
 - 홍동면을 대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형태 중 하나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의 경제성을 검토해 본 결과 10년 동안 운행하는 경우 총8억 5,355만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개 면을 대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현재 정부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1개 군에 지원하는 예산에 가까워 운행 방식의 효율성 확보, 정부의 지원 예산 확대,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제안)
 - 1. 교통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 1) 택시 운임 보조 방식은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으나 이용 인원의 제한과 운행 대상 지역 확대시 정부 재정 부담이 큼
 - 2) 운영 주체와 운행 형태를 다양화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 및 사업 종료



후 지속성 확보 필요

- 2. 지역 주민 주도의 교통 수단 도입

- 1) 운수업체 대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통모델 운영 권장
- 2) 마을과 면 소재지를 잇는 지선 구간 중 버스나 택시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선 도입 검토
- 3)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농협 등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

- 3.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 1) 농어촌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여 통해 중심지-배후지 간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2)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간 연계 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 사업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조직 지원
- 3)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비 중 일정 액수를 교통모델 사업의 확대·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2.2.2 농어촌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 (배경) 지역별 건강수준을 비교해 보면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나쁘다.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주민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는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주민의 51.2%, 89.7%가 각각 읍·면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병·의원,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 농어촌 의료인력의 숫자를 증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접근성 확보를 통한 농어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최종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농어촌의 미충족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농어촌 지역 의료 접근성 제고 필요의 근거를 확보하고 주요 외국의 정책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 농어촌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개인과 지역 수준의 의료 이용 및 미충족의료 현

황을 파악한 결과, 상용치료원 측면에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문제가 여전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세 명중 한명 꼴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어촌 지역 의사 확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 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 제안) 농어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제고하려면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주요 선진국의 정책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1) 실태 조사 결과, 도·농간의 의료 격차가 양적 수준 보다는 질적 수준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 지역별로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수를 파악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3) 의료인력의 총량을 증가시켜 낙수효과를 얻기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별도의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4)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선발과 교육, 근무 지속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의료자원 등 관련 의료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와는 다른 정책의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 6) 무엇보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지방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단기 정책으로는 ① 현재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② 비활동 의료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는 방안, ③ 의료인력이 확충이 아닌 out-reach 서비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 ④ 의사가 아닌 다른 보건의료인력을 투입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 농어촌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장기 정책으로는 농어촌에 특화된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특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과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별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제도가 있다.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배경) 2015년부터 발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홍보하고, 농어촌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 2017년 사례집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등 부문별로 우수한 추진 사례를 발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 (대상 정책) 농촌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농민,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했다.
 -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홍보 방안) 우수사례 10선을 소개한 캘린더와 사례집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 주요 추진 내용

▣ 지역사회, 장흥의 건강을 책임지다: 장흥군 보건소

- (배경과 계기) 농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전문가와 서비스 전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 (주요 사업) 50~70대의 주민 대상으로 건강강좌 프로그램 ‘푸른장흥건강대학’ 운영, 수강생 졸업 후 건강 관리 방법을 전파하는 건강운동 지도자로 활동한다.
- (시사점) 지역 주민의 역량을 활용해 상향식 건강보건 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 **여성 농업인이 꾸리는 생산과 복지의 행복 공동체**

: 무안 여성농업인센터

- (배경과 계기) 가사와 농업 활동에 바빠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여성농업인들의 낮아진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 (주요 사업) 여성농업인 자녀 대상의 공부방 운영, 주민 대상의 다양한 교육사업, 독거노인에게 반찬꾸러미를 배달하는 복지사업, 무안군여성농민회 ‘언니네텃밭 무안공동체’ 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 식량주권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 (시사점) 여성 농업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주어진 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체 발굴 사업을 추진했다.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의 미래**

: 완주 고산향 교육공동체

- (배경과 계기)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고산면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행정, 지역 구성원이 참여해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 (주요 사업) 교육 포럼, 교육 한마당 행사 등을 매년 개최하고 고산향 공동 교육과정 마련,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유·초·중·고 단계별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했다.
- (시사점) 관내 초·중·고교와 지역의 리더들, 민관이 참여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 내고향 두원마을: 진안 두원마을**

- (배경과 계기) 지속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황폐해진 두원마을은 2007년 귀농·귀촌 흐름에 따라 재정향우회를 중심으로 귀향민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 (주요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으뜸만들기 사업 등으로 마을 꽃길 가꾸기, 체육공원 조성, 절임배추공장 등을 만들었다.



- (시사점) 주민주도의 마을 경관 가꾸기에서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목표(소득사업)를 달성해가는 방식을 배우고, 내부 인적 역량을 강화시켜나갔다. 또한 마을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합의조정해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의 마을가꾸기를 이루었다.

▣ 농촌관광의 새로운 실험: 강진 푸소체험

- (배경과 계기) 강진은 풍부한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매년 감소하였고 고령화와 과소화, 지역 농어가의 소득 기반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강진군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 푸소 체험프로그램을 기획·도입하였다.
- (주요 사업) 지역 내 관광 거점과 참여 농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민박을 결합한 1박 2일, 2박 3일 코스를 기획·운영한다. 지자체는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농가 대상의 교육을 담당하고, 참여농가들은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
- (시사점) 개별 경영체가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 함양군 특화산업, 농민 창업의 길을 열다

: 함양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배경과 계기) 산간지형인 함양군은 농산물을 가공해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공통 관심사였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려고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을 참여하였다.
- (주요 사업)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성과 지역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가공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했다.
- (시사점) 정부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가공센터 운영과 연계·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다.

▣ 생활문화를 디자인하다: 금산 문화의 집

- (배경과 계기) 1990년대 후반 운영을 시작한 금산 문화의 집은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였다.

- (주요 사업) 주민들의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고,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공모사업 연계, 지역·마을 행사와 연결하는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여 농촌의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 (시사점) 주민 각자의 문화 생활 증진으로 공동체가 형성 될 수 있었고, 공동체는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서비스 제공, 문화 격차 해소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만들었다.

▣ **칠갑산 자락에서 싹틔운 예술꽃 씨앗: 청양 수정초등학교**

- (배경과 계기)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는 공모제 교장이 부임하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농촌의 제한된 문화 예술 교육 기회를 넓히려고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을 했다.
- (주요 사업) 영어, 미술, 태권도 등의 특기적성, 교과기초학습, 국악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시사점)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농촌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악취잡고 소득올린 유일무이 반전마을**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 (배경과 계기) 홍천군의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지역의 기반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을 따냈다.
- (주요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로 도시가스를 제공받고, 퇴액비 자원화 시설로 무료로 퇴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를 파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고정 수입이 생겼다.
- (시사점)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확보한 점이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 **지역사회 품속에서 성장하는 젊고 따뜻한 농장**
: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 (배경과 계기) 홍성군 장곡면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의 농업의 지속여부가 문제되었다.
- (주요 사업)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농장과, 만성질환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재활을 돕는 농장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 (시사점) 고령화, 귀농귀촌, 다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농촌에 양산되는 사회적 배제를 농업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 3.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3.2. 농어촌 서비스 기준 협의회 개최
- 3.3. 삶의 질 정책 이슈리포트 발간
- 3.4.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3.5. 삶의 질 향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3.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개요

- 일시: 2017년 12월 13일 (수) 13:00~17:4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 주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 발표 내용
 - 1)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
 - 2) 행복 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
 - 3)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
 - 4)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

○ 참석 인원: 100명

프로그램	진행 내용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김성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김성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영사: 최성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장(최영희 회장(한국농어촌공사))
14:00-14:15	주요내용 기조강연: 송정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14:15-14:30	주제 1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 김성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김성일 원장(한국농어촌공사))
14:30-14:45	주제 2 행복 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 최영희 / 한국농어촌공사 이사장
14:45-14:55	주제 3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 최영희 / 한국농어촌공사 이사장
14:55-16:15	주제 4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 최영희 / 한국농어촌공사 이사장
16:15-16:30	총회 및 질의응답
16:30-17:40	폐회식 폐회사: 송정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김성일 원장(한국농어촌공사)) 축사: 김성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성일 장관(농림축산식품부)) 환영사: 최성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회장(최영희 회장(한국농어촌공사)) 폐회사: 송정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김성일 원장(한국농어촌공사))
17:40	별도 별도 진행(한국농어촌개발사업(농어촌) 지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솔로 448(건물 179-06)
 세종특별자치시 다솔로 448(건물 179-06)
 세종특별자치시 다솔로 448(건물 179-06)
 세종특별자치시 다솔로 448(건물 179-06)

2017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
 제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일시 | 2017. 12. 13.(수) 13:00-17:40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주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개발사업(농어촌) 지원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후원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 내용

- 전문가, 현장 활동가, 지역 리더를 초청하여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년~2019년) 3년차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였다.
-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 주요 토론 내용

- 삶의 질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에 대해 성찰하고, 지역 자원을 이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지방 분권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 자치이다.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강화하려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지침을 바꾸었다.
 - 주민 자치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중간지원조직 등 행정의 체계를 통합하여 지방 분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후관리와 연계 사업으로 마을 발전이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중간지원조직이 일상적인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자립화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농촌의 미래와 비전을 꿈꾸는 방법이라고 본다.
- 삶의 질이란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현실은 괴리가 존재한다. 통계의 수치와 주민이 직접 느끼는 바는 다르다. 요양시스템, 보호센터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노인들의 활동 영역은 제한되어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공동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없다면 농촌은 행복해질 수 없다.
 - 농가 소득 보전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하여 주민 복지에 활용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정부는 농어촌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농촌 지역의 개발은 여건에 맞추어 변화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촌을 개발하는 정책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의 대세를 막을 수 없다.
 - 기존 마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영화관을 개관하여 인근 도시로 가지 않고 읍내에서 영화를 보도록 하거나 농촌 지역 버스를 소형화하여 유지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농촌 지역 현실에 맞게 변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노인 요양원 문제는 심각한 부분으로 우후죽순 시설은 늘어나는 데 비해 서비스나 인력의 질은 낮다. 이를 향상시키도록 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경관 사업의 취지에 맞는 나무 심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 삶의 질과 인구 공동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식에서 생각해야 한다.
- 삶의 질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책 방향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년~2019년)에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목표 달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역개발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분과위원회를 현장의 소리와 정책을 매칭 시키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및 국회가 토론 및 모임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련한 사항을 내년 초 하달할 계획이다. 자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 많은 사업이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농업·농촌의 주도층을 만족시키는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농업 생산이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컨설팅 회사가 담당하게 하고 공모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 새 정부에서 말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포용 국가가 되려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 지방소멸에 쓰는 데이터와 자료에 현혹될 필요 없다.



- 일본은 마을, 사람, 일자리에 키워드를 두고 있다. 우리도 삶의 질, 일자리에 집중하여 발전해야 할 것이다.

□ 행사 사진



3.2. 농어촌 서비스 기준 협의회 개최

❖ 개요

- 일 시: 2017년 11월 3일 (금) 14:00~15:30
- 장 소: 정부세종청사 4동 566호
- 논의 내용
 - 1)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개편 방안 논의
 - 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참석: 농어촌 서비스 기준 협의회 민간위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14명)

❖ 주요 내용

-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개편 방안 논의
 - ① 경찰순찰
 - 경찰순찰 항목은 통계 자료를 구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 탄력순찰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경찰순찰 항목의 개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 탄력순찰 지점을 비롯하여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다. 경찰청 내부적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친 뒤라야,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항목 개편 작업을 수행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경찰청 의견).
 - ② 주택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 관련 통계 조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을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농촌 지역 주택들의 건축 연한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국토연구원 의견).
 - 주택 항목 해당 통계 조사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군별 이행실태 점검의



통계적 보완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국토부 의견).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기준 이행도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문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 중장기적으로 농촌 실정에 맞는 항목을 개발하고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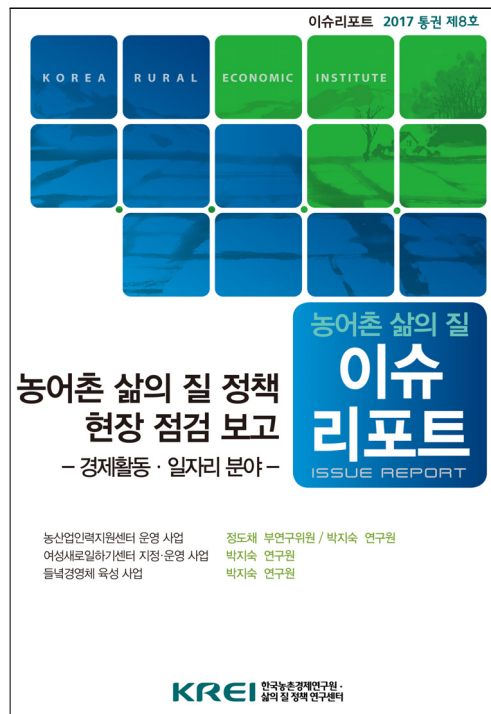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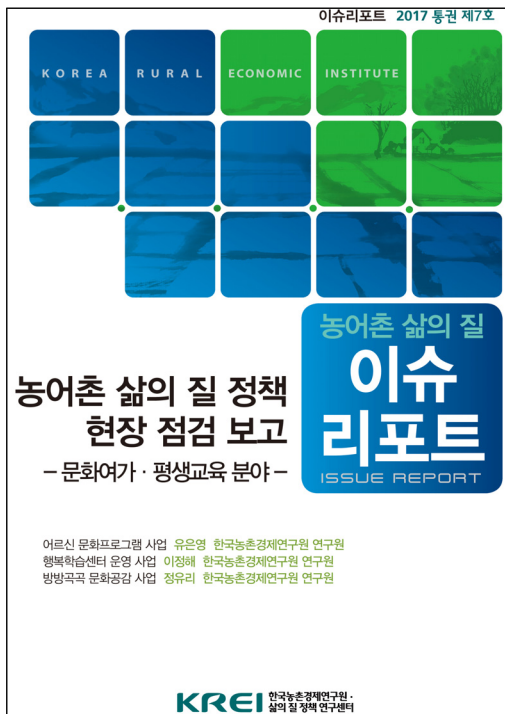
3.3. 삶의 질 정책 이슈리포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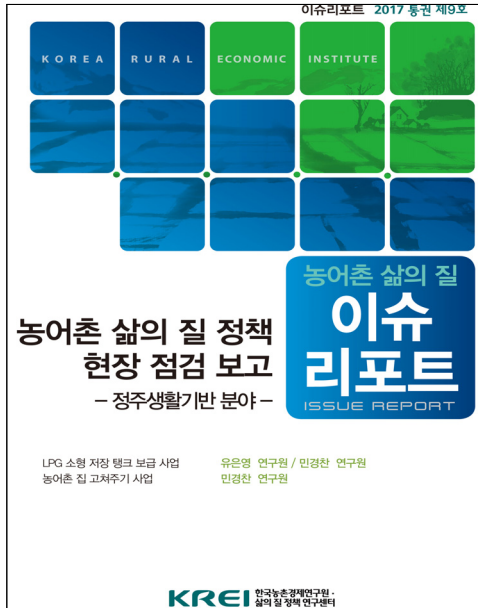
❖ 개요

- 농어촌 삶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이슈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삶의 질 정책 방향 및 연구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슈리포트를 발간한다.
 -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 사항을 도출한다.
- 또한 정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현장 주체(삶의 질 현장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삶의 질 정책 개선 및 발굴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이슈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공동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자와 심층 연구를 수행한다.
- 발간한 이슈리포트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시군 삶의 질 담당부서 혹은 기획실, 삶의 질 정책지원 연구네트워크(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삶의 질 현장자문단,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KREI 통신원과 리포터 등에게 배포한다.
- 2015년 7월 1호를 시작으로 통권 10호까지 발간하였다.
 - 이슈리포트 1호는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5.09).
 - 이슈리포트 2호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5.11).
 - 이슈리포트 3호는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6.01).
 - 이슈리포트 4호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그 효과와 향후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1편의 글을 실었다(2016.03).
 - 이슈리포트 5호는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6.07).



- 이슈리포트 6호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2편의 글을 실었다(2016.12).
- 이슈리포트 7호는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문화·여가·평생교육 분야”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7.12).
- 이슈리포트 8호는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경제활동·일자리 분야”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7.12).
- 이슈리포트 9호는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정주생활기반 분야”라는 제목으로 총 2편의 글을 실었다(2017.12).
- 이슈리포트 10호는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여성·아동복지 분야”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었다(2017.12).





❖ 주요 추진 내용

▣ 이슈리포트 7호

- (제목)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문화여가평생교육 분야-
- (구성)
 - 현장 조사 보고서: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유은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이정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정유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이슈) 이슈리포트 제7호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문화여가평생교육 분야의 정책 3건을 조사한 내용을 다루었다.
 - 문화여가평생교육 분야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을 살펴보았다.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조사 결과를 정리했으며, 정책별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 (내용) 사업별로 작성한 현장 조사 보고서 3편을 실었다.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슈리포트 8호

○ (제목)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경제활동일자리 분야-

○ (구성)

- 현장 조사 보고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지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박지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박지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이슈) 이슈리포트 제8호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일자리 분야의 정책 3건을 조사한 내용을 다루었다.

- 경제활동일자리 분야의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을 살펴보았다.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조사 결과를 정리했으며, 정책별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 (내용) 사업별로 작성한 현장 조사 보고서 3편을 실었다.
 -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슈리포트 9호

- (제목)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정주생활기반 분야-
- (구성)
 - 현장 조사 보고서:
 -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유은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민경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민경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이슈) 이슈리포트 제9호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정주생활기반 분야의 정책 2건을 조사한 내용을 다루었다.
 - 정주생활기반 분야의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살펴보았다.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했으며, 정책별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 (내용) 사업별로 작성한 현장 조사 보고서 2편을 실었다.
 -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슈리포트 10호

- (제목)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여성아동복지 분야
- (구성)
 - 현장 조사 보고서:
 -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이정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이슈) 이슈리포트 제10호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여성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3건을 조사한 내용을 다루었다.
 - 여성아동복지 분야의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조사 결과를 정리했으며, 정책별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 (내용) 사업별로 작성한 현장 조사 보고서 3편을 실었다.
 -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의 현장 조사 보고서는 사업 목적,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사례 지역의 사업 현황, 추진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사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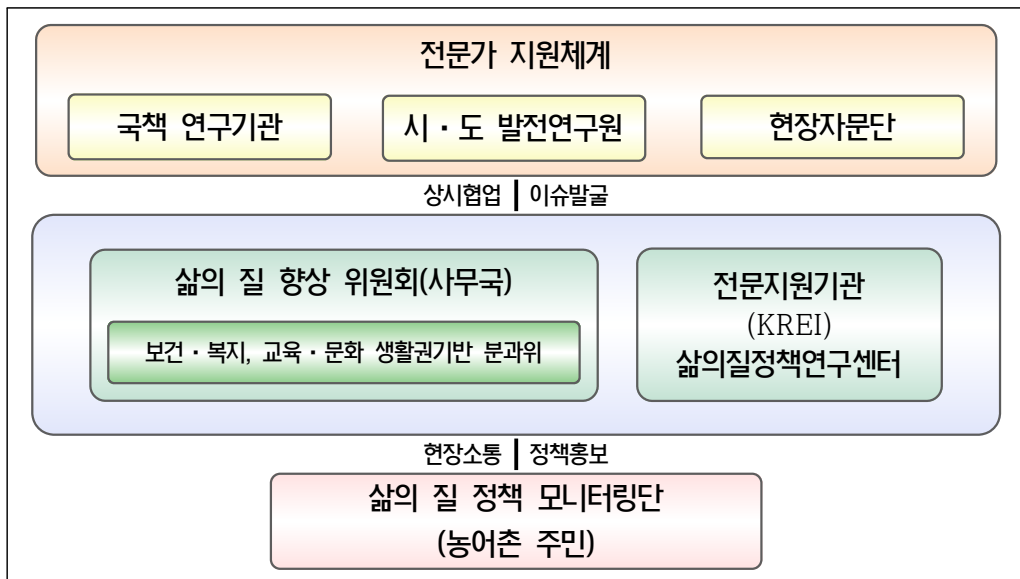


3.4.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도에 협약을 맺고 정책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교사, 사회복지사, 공중보건 의사, 구급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농촌 현장의 여론,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각 일원이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농촌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7개의 국책연구원, 9개의 시도연구원,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현장자문단(53명),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단(13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주요 내용

□ 현장자문단 운영

○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배경	- 서비스 전달자 및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파악. 이를 연구에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제시 - ‘현장자문단’ 조직을 구성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출 범	- 2015년 7월 21일 출범식(서울 양재동 aT 센터) - 정책모니터링단(KREI 리포터)과 함께 현장네트워크 구성
조직구성	- 삶의 질 7대 정책 부문별 현장 전문가로 구성 - 보건·복지 분야 14명, 교육 분야 9명, 정주생활기반 4명, 경제활동·일자리 8명, 문화·여가 8명, 환경·경관 4명, 안전 6명
운영 시스템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운영
성과 관리	- 연구자문 및 이슈 발굴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대토론회에 의견 제시

□ 정책지원 네트워크 공동 연구 진행

- 정책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국책·시도연구원과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심층연구’,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역평가 연구’, ‘2017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에 대한 업무에서 협업 및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심층연구 주제 및 연구기관>

제목	연구기관
농촌 지역 수용응답형 교통 서비스 선호도 및 재무성 분석	충남연구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역평가 연구 주제 및 연구기관>

부문	정책군	연구기관
보건·복지	대상그룹별 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전북연구원
	대상그룹별 복지서비스 강화	강원발전연구원
교육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강원발전연구원
정주생활기반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대구경북연구원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촌 일자리 지원	충북연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제주발전연구원
문화·여가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전북연구원
환경·경관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 환경 조성	충남연구원
	해양폐기물 정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제주연구원
안전	농어촌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충북연구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제주발전연구원

<지자체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참여 연구기관>

핵심 항목 점검부분	연구기관
2017 강원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강원발전연구원
2017 충청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충북연구원
2017 충청남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충남연구원
2017 전라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전북연구원
2017 경상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대구경북연구원
2017 경상남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경남발전연구원
2017 제주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제주발전연구원

3.5. 삶의 질 향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개요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였다.
 - 삶의 질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교육·문화, 보건·복지,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각 분과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삶의 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과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생실태 점검·평가 결과 등 분야별 토론·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2017년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1회씩 개최하였으며, 전문지원기관은 각 분과위원회 논의 안건을 제시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주요 내용

-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생활권 기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17년 12월 13일 (수)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소회의실
 - 참석: 유정규 단장(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외 농촌교통 전문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담당자,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 안건: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연계 방안,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개편 방안
 - 전문지원기관은 심층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교육·문화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 교육·문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17년 12월 21일 (목)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 참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외 당연직 위원, 정진철 교수(서울대) 외 위촉직 위원,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 안건: 16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17년 시행계획, 농어촌 학교 활성화, 농어촌 어르신 구술 사업
- － 전문지원기관은 교육·문화 관련 16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개선 과제를 논의 안건으로 제공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준비한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농어촌 어르신 구술 사업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였다.
-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17년 12월 18일 (월)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간사) 외 당연직 위원, 윤정미 연구위원(충남연구원) 외 위촉직 위원, 전문지원기관 담당자
 - 논의 안건: 농촌 분만 환경 개선 방안, 농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혼합반 허용 검토,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 － 전문지원기관은 농촌 분만환경 개선, 농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혼합반 허용,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대한 농촌 복지 여성과의 안건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안건별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